

‘여순사건’ 억울한 희생자 첫 재심 열리나

군사 재판 사형 선고 처형
순천시민 3명 재심 청구
대법원 21일 최종결론

대법원이 1948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여부를 오는 21일 결정키로 해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 4·3사건 일부 희생자는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여순사건 피해자의 재심은 아직까지 이뤄진 적이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순천 시민이었던 장씨 등은 1948년 10

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9년 여순사건 이후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내자 장씨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군과 경찰이 장씨 등을 불법으로 체포해 감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 내용과 증거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향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볼 수도 있다”

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고했지만, 2심인 광주고법도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7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순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수사·재판기록이 불분명한 사건에 대한 재심결정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대법원이 1·2심 판단에 따라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우익 인사가 손가락으로 지목하면 희생 당하는 등 여순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처형이 자행됐다는 점”이라며 “당시 계엄령 아래 민간인에게 군법을 적용해 3심 제도를 거치지 않고 처형하는 것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진정 법치국가였는지 의문이 갔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2000여 명이 제주 4·3사건 투입을 반대하며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월28일 수복 이전까지 전남·전북·경남 일부지역 민간인 집단희생과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여수 5000명, 순천 2000명, 광양 1300명, 구례 800명, 보성·고흥·곡성 7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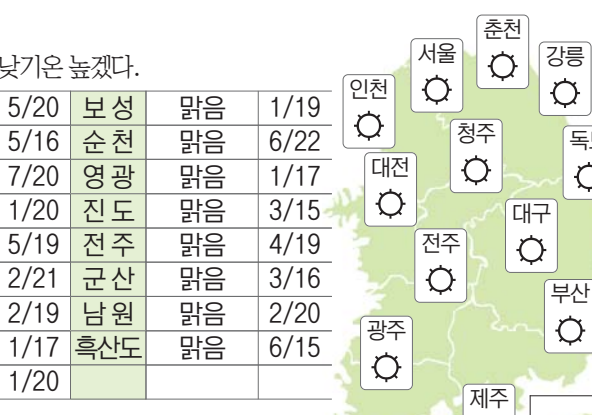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9
해질녘 18:43
달뜨기 16:37
달지기 05:31

따스한 햇살 가득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기는 높겠다.

광주	맑음	5/20	보성	맑음	1/19
목포	맑음	5/16	순천	맑음	6/22
여수	맑음	7/20	영광	맑음	1/17
나주	맑음	1/20	진도	맑음	3/15
완주	맑음	5/19	전주	맑음	4/19
구례	맑음	2/21	군산	맑음	3/16
강진	맑음	2/19	남원	맑음	2/20
해남	맑음	1/17	흑산도	맑음	6/15
장성	맑음	1/2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북~북동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북~북동	0.5~1.5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북~북동	1.0~2.0	북서~북	1.0~2.0

◇ 물때

	간조	만조
	05:56 18:37	00:22 13:09
여수	01:37 14:14	08:09 20:24

◇ 주간 날씨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8/19	9/15	2/11	1/12	1/14	2/15	2/15

◇ 생활지수

	보통
	보통
	보통



묵은때 지워내며... 봄맞이 대청소

18일 광주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남쪽 버스승강장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통장단들이 겨울철 묵은 때를 지우며 새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5·18구속부상자회

공법단체 지정 위해

‘5·18공로자회’로 명칭 바꾼다

(사)5·18구속부상자회가 공법단체 지정을 위해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5·18구속부상자회는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는 한편, 5·18공로자회의 회원 자격은 ‘5·18민주공약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따른 부상등급이 없고 기타지원금을 받은 기타희생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해 등급이 있는 기존 회원 2000명은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집단 입회를 추진한다.

5·18구속부상자회는 공법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자격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신학기 혼란 부른 미세먼지 ‘뒷북 대응’

시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예산 뒤통에 배부
저소득층 1만여명 마스크 택배배송 논란

광주시교육청의 미숙한 ‘미세먼지 행정’이 신학기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월 공·사립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구입 예산 26억원을 배부했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4~6학년 1734개 교실로 시교육청은 다음달까지 설치와 정산을 마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저학년에도 이어 광주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게 된다.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도 1·2월을 허송한 뒤, 신학기 들어 1주일 이상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진 뒤에야 예산을 배부해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신설 학교들에는 공기정화와 에어컨 기능을 갖춘 중앙 공조장치가 설치됐는데도 시교육청은 똑같이 예산을 배부했다가 뒤늦게 환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으로 교강실, 교강실, 행정실 등 학교 관리자 사무실에 설치했다가 민원이 나오자 옮기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저소득 가정 학생 등 1만 4000여명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고려, 택배를 지시했다. 그러나 교단에서 택배 발송에 따른 업무폭증 불만이 쏟아지자, 시교육청은 ‘마스크를 직접 학생에게 쥐어 준다’는 수정

공문을 보냈고, 수정공문에서는 ‘결과 보고서 인증사진을 첨부하라’고 요구했다가 학교 현장의 항의를 받고 ‘인증사진 요구’를 거둬들이기도 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학기 광주시교육청의 미숙한 미세먼지 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거듭 혼란을 겪어야 했다. 광주교육청은 타 사로 사례를 학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라”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성비위 징계교원 복귀전 최장 50시간 재발방지 교육

성 비위로 징계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광주 교사들은 최장 50시간 재발 방지 교육을 받는다.

18일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징계 교원 재발 방지 의무교육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은 재발방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평등 학교문화, 피해자 공감하기 등으로 20~5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당국이 성비위 교원에게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임·파면 등 중징

계 처분이 흔하지만 매우 경미한 수준에서는 교단 복귀 사례도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이른바 ‘스물 마루’로 수사받은 3개교 교사 34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가운데 기소되지 않은 교사 등 일부도 복귀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교육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 강사가 소속된 기관을 재발방지 특별 교육 기관으로 지정했다. 의무교육은 전액 교육생이 자비로 들어야 하며, 교단 복귀 전 교육 이수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

조선평대 학부모협의회 결성...조속 정상화 촉구

조선평대가 학사 구조 개편안을 놓고 학내 갈등이 장기화하자 학부모들이 단체를 결성,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평대 학부모 협의회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지역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줘서는 안되고 교수와 직원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거

듭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대학의 혁신을 위해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발전기금 조성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평대 학부모협의회는 현재 재학생 학부모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학내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채희종 기자 chae@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융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정제역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기준치 5.0 배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약속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서해안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주 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